

We have to search for what and who is behind our actions, discourses, not who is behind the (candlelight) vigils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울부터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부산문화방송의 ‘시사포커스’에서는 부산전교조 정책실장 ▽▽▽ 선생과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그리고 ××× 교육대학원 교수 ◇◇◇까지 각계각층의 4명의 인사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예상이 어떻게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할 수 있을까? 방송을 보는 내내 학부모와 전교조, 그리고 교수와 행정관료 두 측으로 나누어진 양 진영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 및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 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심하게 달랐다. 학부모와 전교조 측이 교원평가제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문제점, 기존의 평가제도가 갖는 한계 등을 교원평가제 시행이후의 사회의 변화나 현행의 교육제도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사례와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반면, 교육청의 ○○○ 과장과 ◇◇◇ 교수는 교원평가제의 내용과 시행 당위성만을 반복하고, 교원평가제가 사회에 끼칠 부작용이나 교육계의 예상 가능한 변화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학부모나 전교조 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거나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¹⁾.

부산 교육청의 ○○○과장의 주장을 통해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방송 내내 그는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사의 자질 향상, 공교육 내실화’를 주장하였다. 교원평가제를 시행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달인 교사에게는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1)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조소할 뿐이었으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무시할 뿐이었다. 삶과 삶은 서로 소통되지 않았다. 삶은 스스로의 위계 조직에 충실하였고, 삶도 스스로의 위계 조직에 충실할 뿐, 삶과 삶 사이의 수평적 상호 구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많이 배운 이들이든 적게 배운 이들이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는 이 피이드백 구조는 늘 위험한 불경(不敬)이었다. 삶은 삶대로 삶은 삶대로 스스로 충족된 폐쇄적 위계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대로 각자의 논리와 규율에 따라 때로 행진하다가 때로 출추곤 할 뿐이었다.

대화를 삶과 삶의 만남,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만남 그리고 그 긴장과 참음으로 정의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대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삶과 삶이 서로를 경계하는 긴장 속에서야 대화의 창이 열릴 수 있는데, 각각의 위계질서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소동으로는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는다.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삶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은 늘 삶의 마루턱에 정좌해 있는 진리와 이를 담고 있는 원전에 불박혀 있다. 이들에게 삶이 어떠한 크게 신경 쓸 바 없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원전 등이 설정해 놓은 위계질서에 순종해서 신분 상승이나 도모하는 일이다. 옆을 보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위를 보고 미소라도 한번 더 짓는 것이 유리하고, 따라서 현명하다. 이들에게 대화는 위험한 희망일 뿐이다. 늘 계몽의 객체였고, 또 그 계몽의 광휘에 스스로 놀라워했던 이들은 계몽의 주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만족해 왔다. 계몽의 객체인 이웃과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계몽의 주체인 바깥을 보고 감사의 미소라도 한 번 더 짓는 것이 유리했고, 따라서 현명했다(김영민, 1998-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p95).

그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이란 수업을 잘하는 교사,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교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수업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를 통해 땅에 떨어진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당연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의 논의에는 그러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전제가 빠져있다. ‘교사가 수업을 더 잘하게 되면 공교육이 내실해진다’는 주장에는 교육에 대한 정부와 교육학 전문가들의 정의를 전제한다. 우선 ‘교사가 수업을 잘하면’이라는 주장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상과 교육이 단순히 수업에서의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의 당사자를 교사로만 보는 시각, 그리하여 교육을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일방적 지식주입 및 전달의 형식으로 보는 전제가 깔려있다**²⁾.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교사를 절대적 우위로 보고 더불어 학생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관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교육은 교사에서 학생으로의 일방통행(monologue)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은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행위가 되고, 교사와 학생의 교감과 인간적인 만남은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수백만 명의 각기 다른 학생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방향으로 ‘편의적’으로 규격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³⁾. 또한 **교사가 수업을 잘하면 ‘공교육이 내실화’ 된다는 주장에서는 공교육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을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환경 등이 아니라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깔려있다.** 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 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의 situated 그리고 complicated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해하고서도 교묘하게 책임회피를 위해 교사의 문제로 단순화시킴으로써 **교육=교사의 문제**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심리주의를** 드러낸다. 또한 ‘공교육내실화’라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획득하려는 목적 또한 그 안에 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즉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근대화된 학교교육 이외의 우리 생활 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학습형태 놀이나 다른 여러 활동 그리고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한 교육이나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는 대안학교 등의 교육 중에서 학교교육을 절대적인 상위의 개념으로 보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학교 교육의 강조는 교육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배양 수단으로 간주하는 수단적 목적이 깔려있다. 유럽에서 정부 주도의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제국주의와 국민국가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 중세에

2) All too often we treat children as object of concern, rather than people with concern.

3) 우리 땅에서 시민 정신이니 사회성이니 공동체성이니 연대성이니 대화성이니 하는 미덕을 늘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뒷사람에게 아되고 또 그로부터 지시를 받는 구조에만 익숙하다 보니 앞서사람과의 합리적인 교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배움의 과정에 든 학생들에게 뒷사람이란 대개 책이거나 혹은 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다. 임시 위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더 약화된 점이 있지만, 고등학교까지의 우리 교육은 <책>이라는 상전을 잘 모시는 데 집중된다. 책에 미주알고주알 아되고 또 책으로부터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신분 상승의 맛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다. 책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옆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배운다. 하얀 백지 위에 깨끗하게 정돈된 정보를 외면하고 온갖 잡색의 이야기들이 마음대로 부유하는 현실에 관심을 두는 것은 신분 상승을 포기하는 무모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배운다. 어쨌든 학교교육은 시험을 잘치르는 일에 집중되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잡색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색의 교과서에만 코를 박고 있어야 한다. 삶을 위한 읽어야 할 때, 또한 구조를 타고 있는 삶이 필요 이상의 힘을 얻는 것은 오히려 삶을 갈아엎개고 있는 셈이다(김영민, 1998-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p96).

일반 농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였으나, 이후 부르주아지의 등장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의 발달은 부르주아지의 입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이전의 교회의 신화가 아닌 더 높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원하는 왕의 입장이 서로 맞물려 국민국가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등장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함께 이전에는 농노였던 일반 백성들의 역할도 이제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획득하였고, 이들의 역할 또한 국가의 구성원, 즉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한 '말'의 역할과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자'의 역할로 변하게 되었다. 국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유지, 특히 권력층의 기득권 유지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대 이전에는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허용되었던 교육을 국가가 직접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국가주도의 공교육이 시행되었다. 즉, 공교육은 국가의 유지를 위한 국민의 생성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방향 또한 개개인의 자유나 창의성 존중, 다양한 관점의 인정 등 학생에 맞춘 것이 아니라 효율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효율적 인재라는 말은 개인적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의 효율적 인재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영어와 수학에는 관심이 없으나, 사물이나 대상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성찰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다면 개인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재능을 살리는 것이 못하는 영어 공부하느라 몇 년을 허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가적 입장에서는 글로벌시대 회사의 직원이나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대접하기 위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득이고, 따라서 지금과 같이 영어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형태 중 공교육 강조는 권력을 쥔 측과 이들의 입장을 대신 집행하는 행정관료 측의 '교육일원화를 통한 편리성 추구'라는 행정주의, 편의주의가 깔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과 일원화를 통한 관리의 편의성 추구를 위해 이전에는 학생들에게만 적용하였던 효율성 잣대를 교사에게도 적용하여 국가수준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바로 교원평가제의 숨겨진 목적이고, 이를 대변하는 쪽이 행정 관료이다. 이렇듯 교원평가제의 시행에는 교육에 대한 정부 측의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국민이 될 학생과 현장에서 학생과 교감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에서의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제 전면시행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교육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고 통치해나갈 것인가와 관계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며,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강화하는 측면에서, 최근의 언론장악,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를 정부의 권력 장악 속셈으로 보았을 때, 앞서 말했던 언론, 노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원평가제 또한 밀어붙이기식 입법강행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하기에 교원평가제를 우선 시행한 선도학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평가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내년 3월에 입법을 강행한다던가, 그리고 입법화가 안 되면 대책은 없고, 다시 입법화를 시도하겠다는 행정 관료의 태도는 씩

쓸하지만, 2009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밀어붙이기식 입법강행)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층의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는 민주주의적 토양(민주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논의해야할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다수의 지지라는 측면에서)이 발달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권력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조장해 왔고, 이득을 얻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의해 도전, 반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즉, 대화와 토론,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합의가 아닌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문제를 어떻게 교묘하게 권력층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돌려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행정 관료가 교원평가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교육을 통한 권력층의 기득권 유지, 국가적 효율성이라는 목적이 깔려있는 반면, 동아대 교육학 교수인 ◇◇◇의 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⁴⁾

교원평가제에 대한 방송 내내 ◇◇◇선생은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발언도 제일 적게 하였고, 간혹 가다 하는 발언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라고 보다는 교육과 교사에 관한 원론적 얘기 말을 바꾸면 떠도는 말들이 전부였다. 게다가 토론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교육학 교수'의 자격으로 나와 있었던 ◇◇◇선생은 자신의 분야는 교육학이라, 평가 분야는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한다. ◇◇◇의 이러한 태도는 소위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게 만드는 한편, 현재 한국에서 전문가란 어떤 집단인가를 잘 보여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는 '특정분야'의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특정 분과, 특정 학문 심지어 특정 학과의 특정 영역에서의 전문가일 뿐(사실 그것 또한 과연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는 무척 의심스럽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학문의 전문가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 아래로 더 많이 쪼개고, 더 많이 나눈 결과는 학문 분야 간 심지어, 같은 분과 학문 내에서의 소통의 단절이다. 이러한 학문에 대한 기계적 접근은 (대상을 쪼개고 나눠 분리해 생각하는 것)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 집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상의 한 면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결국 다양한 대상과 관계하며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 사고나 맥락적 분석을 요원한 일로 만들었다⁵⁾. 그리고 환원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학문은 이제 현실과 유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상아탑'이 되어 버렸다.⁶⁾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특정분야에 정통하

4)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구매자와 판매자로 나누고서는, 구매자들이 판매자들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버린다. 만일 내가 그에게 그 점을 상기시킨다면 그의 문법이 바뀔까?” 대체로 전문가들은 사람들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누고서는 전문가가 비전문가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물음을 이렇게 바꿔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사실을 전문가들에게 상기시킨다면 그들의 문법이 바뀔까?”

5) 미시적인 분야 나누기는 공부의 깊이에서 장점도 많지만 결국 사회와 소통할 수 없는, 지식 생산의 '라인'에서 한 나사만 돌릴 줄 아는 '전공자'를 만들으로써 자본과 국가 앞에서 지식인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6) 금강산도 석후경이라지만, 그러나 경물(景物)에 취하면 옆사람 배고픈 줄 모르는 법이다. <계몽>받기 위해서 바깥바라기에 여념이 없던 시절에 이웃의 복색이나 음성 따위가 눈과 귀에 들어올리었다. 마찬가지로 명령과 주입에 무비관적으로 순치된 정신으로서는 비판과 대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구는 애초부터 비판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계몽의 주체로서 들어온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었던가. 그래서 이 계몽의 주체를 신구 모시듯 하면서 수직적 위계 구도만을 확인하는 식의 학문을 일삼았던가.

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일들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즉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또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일들에 뚜렷한 형체를 부여하는 해답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집단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